순천시, 관광·복지 결합 반려친화도시로 '우뚝'

생태 공간·문화센터 등 인프라 조성
'댕댕순천 반값여행' 관광·상권 활력
반려견 순찰대·돌봄 프로그램 도입
市 "사람·동물 행복한 도시 완성 목표"


전남광주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일원에서 최근 열린 '댕크닉 쉬어가개' 행사에서 시민들과 반려견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1천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반려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기준 2025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9.2%에 달하며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 시장 규모도 2022년 이미 8조5천억원 수준을 넘어섰다.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가 핵심적인 도시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순천시는 전남권 최초 '반려동물관광친화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우선 순천의 독보적인 생태 자원을 활용한 오천그린광장, 조례호수공원, 동천수변공원 등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호흡하는 쾌적한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2023년 8월 호남권 최초로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역할을 수행 중이다.

실생활 중심 교육인 '멍냥시민학교', 시민 참여형 '우리동네 멍냥교실' 등이 큰 호응을 얻으며 최근까지 전국 32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공공시설 우수 운영 사례로 손꼽힌다.

관광 분야로 시는 올 하반기 전국 최초로 '댕댕순천 반값여행'을 도입했다. 타 지역 거주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관광지를 방문해 5만원 이상을 지출하면 경비의 절반(최대 1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역 골목 상권의 경제 선순환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오천그린광장에서 반려견과 함께 달리는 '러닝퍼피'를 비롯해 여름철 물놀이 '2026 댕댕 순천 물개주의보'와 '댕터파크', 명랑운동회인 '댕댕 운동회' 등 계절별 맞춤형 특화 콘텐츠를 쏟아내며 체류형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시는 단순 인프라와 관광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복지 영역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반려견 순찰대 '순댕이'는 산책과 방범을 결합한 지역 안전망으로 현재까지 산책 순찰 672건, 기관 연계 신고 109건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 이달부터는 퇴원 환자와 훈련된 반려동물을 연계해 정서적 위로를 건네는 치유 돌봄 프로그램 '반려잇돌봄'을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관광 트렌드 속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자 삶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순천 만의 탁월한 생태적 강점과 행정을 결합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친화도시를 완성하고 고부가가치 펫 관광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백상현 기자

곡성군, 농지 전수조사·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정립'

실무 회의 불법 엄단·관행적 위반 구제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신고 설치 허용
郡 "현장 혼선 없도록 관리체계 다질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새롭게 완화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 기준 일원화에 나섰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농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현안 처리를 위한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방침에 맞춰 중대한 불법 전용과 투기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되, 상속·고령 등 관행적 위반 사례는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행적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당장 처분 절차를 밟는 대신, 향후 특별조치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합법화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요건과 신고 절차도 집중 점검했다.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은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단, 화장실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축조 신고를 해야 하며 주차장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농로에 접해야 한다. 두 시설 모두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필지에는 추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군은 이와 함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시설물 설치 사항이 누락된 농지대장을 일제 정비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농업 정책 추진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편의시설 기준 완화가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들과 꼼꼼하게 처리 기준을 맞췄다"며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우려를 겪지 않도록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흥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축 시동

로컬푸드 생산자·주민 등 포럼 개최
생산·소비·유통 종합정책 방향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1일 "최근 군민회관에서 먹거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2026년 장흥군 지역먹거리 계획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마련한 포럼에는 로컬푸드 생산 농업인과 주민, 학교급식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가 장흥군 여건에 맞는 먹거리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안대성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대표의 기획 생산 체계 구축 강연과 장성군의 로컬푸드 정책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통·소비되도록 잇는 종합 정책이다. 농가 소득 안정과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군은 포럼을 발판 삼아 생산자·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다지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옥현 농산유통과장은 "포럼이 지역먹거리 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다져 농업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보성군, 기상악화 대비 작물 피해 예방 총력

기술지원단 전문인력 13명 편성
과채류 관리·배수로 등 맞춤 지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1일 "11월 강수량 증가와 일조 부족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전문 인력 13명으로 구성된 원예작물 현장 기술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조 부족과 토양 과습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긴급 편성됐다.

읍·면 농민상담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지도 인력 등이 재배 농가를 순회하며 작물 생육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가을철 딸기 등 시설 과채류는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육이 부진해지고 병해 발생 위험이 커진다. 이에 군은 시설 피복재 세척을 통한 투광률 확보와 보광 조명 활용, 환기를 통한 과습 방지를 안내하고 있다.

노지작물은 뿌리 손상이나 무름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배수로 정비를 지도하고 수확기를 맞은 과수는 당도 하락을 막고자 기상 상황을 고려한 적기 수확을 적극 독려 중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최근 잦은 이상 기후로 농작물 생육 환경이 불리해진 만큼 철저한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밀착 현장 점검과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구례군, 홀몸 어르신 낙상 방지용품 지원

11-12월 1인 노인가구 최대 100만원
복지기동대 연계 발굴·설치 안부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1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고독·고립 위험이 있는 1인 노인가구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용품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사업은 주거 공간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어르신의 부상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바, 침대·변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단차 받침대 등이 생활 여건에 맞춰 제공된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긴밀히 협력한다. 복지기동대가 읍·면 현장에서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물품 설치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 돕는다.

군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설치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안부와 주거 안전 상태를 살펴 일상 속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주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일상 속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잦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담양교육청 장애학생 인권·통합교육

유·초·중·고교 교육자 대상 맞춤 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담양교육지원청은 1일 "최근 본관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교(원)장 및 교(원)감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수는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와 통합교육에 대한 일선 학교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오전 교(원)장, 오후 교(원)감 대상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강에 나선 이승준 리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통합교육 관련 법의 이해와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통합교육 법령을 숙지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호 방안을 짚었다.

담양교육청은 연수를 기반으로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장애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다질 방침이다.

김진홍 담양교육청 교육장은 "연수가 학교 관리자들에게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모든 학생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맞춰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보호수' 생육·안전 실태조사 실시

다지리 등 15개소 57주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1일 "보호수의 쾌적한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이 지정·관리 중인 보호수는 총 845주에 달한다. 정밀 실태조사 용역은 화순읍 다지리 일원을 포함한 15개소의 팽나무와 느티나무 57주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주요 과업 내용은 보호수의 전반적인 생육·안전상태 진단을 비롯해 체계적인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맞춤형 보호수 정비사업 실시설계 등이다.

군은 수목의 주요 결함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각 보호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지침을 세울 방침이다.

특히 정비 우선순위와 적정 공법을 신중히 검토해 내년 상·하반기 보호수 정비사업 설계에 즉각 반영하고 향후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조미화 산림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꼼꼼히 짚어내고 적기 정비를 추진해 건강한 생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